

경찰청 “경찰권한 커지지 않았다”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문무일 검찰총장 정면 비판

“수사 진행, 종결 사건 대한 통제 장치 설계 임의로 수사 종결 주장 사실과 달라” 반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법안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낸 것과 관련, 경찰이 “검찰은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면서 문 총장을 정면 비판했다.

경찰청은 2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와 종결 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다”며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며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이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경찰 권한이 막대해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또 개정안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 문 총장의 의견을 비판한 것으로도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전날 공식 입장을 통해 “형사 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바른 형사 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수사권조정을 다룬 형소법 개정안에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과 경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 사법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형식상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피의자의 사건에 대한 1차 결론을 낼 수 있게 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경찰과 검찰이 같은 범죄 사실을 동시에 다루게 된 경우에도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경찰을 사건을 주도해 수사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60일 간 법적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경찰 수사에 법령 위반, 인권침해, 수사관남용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조치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뉴스

‘청년에 의한 정치문화 정착’

민주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본격 활동 돌입 두세훈 도당 청년위원장 “정책 제안 지속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청년위원회(위원장 두세훈 전북도의원)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일 저녁 7시 전주교육대학교 김서중 홀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청년당원과 도당 상임위원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규백 국회의원과 최재성 국회의원,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등 중앙당 인사들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의 발대식을 축하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두세훈 청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평등한 기회,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북도의 청년 수당 지급은 N포 세대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청년의 힘이 가장 절실한 상황인 만큼 경제와 민생, 평화와 번영을 지켜 나가는 전북도당의 청년당원 동지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국정·사법농단, 사실이라면 반헌법적... 타협 어렵다”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

“정치 어렵다는 것 다시금 절감 어떤 말씀이라도 경청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사회계 원로들을 만나 “정파에 따라 정치권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주 초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갔는데 함께 왔던 의원들이 전부 다 야당 의원들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네라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여소야대 상황이라서 정치적 대립이 많지만, 여야 간에 외교 문제라든지 칠레 경제를 발전시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그런 말이 참으로 부러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는 말도 많이 듣는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식 취임식을 하는 날, 취임식 전에 야당 당사들을 전부 다 방문했다. 그리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 자주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어·아·정 국정 상설협의체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만들었다. 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지 않는다”며 “지난 3월에 열렸어야 하는데 지금 벌써 두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적폐 수사를 그만두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들도 많이 하신다.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

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국정 농단이나 사법 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 공감이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

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로들에게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 걱정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며 “그래도 각오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반드시 감당해 내고 또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오늘 어떤 말씀이라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김제역 정차 주민접근성에 수익성 향상까지 일석이조”

평화당 김종희 의원, KTX 정차 광폭행보 본격화

김제역에 KTX를 정차시키기 위한 민주평화당 김종희 의원 (김제·부안)의 광폭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2일 의원 회관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제2차관과 박준배 김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김제역에서 일일 4회 정차하면 김제와 정주서부권, 부안주민들의 접근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의 수익성마저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와 장성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송정까지만 열차를 운행함으로써 전체 구간의 운행시간 총량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등 일일 28회 운행에 차질이 없게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역 정차를 가장 빠르게 실현할 방법은 목포까지 가는 호남선 일반선로 노선을 하루 4차례 송정역에서 제한하는 것”이라고 김제역 4회 정차 논리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의 이런 제안은 익산역 정차 횟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김제역 정차를 가능케 할 현실적 대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익산주민들은 익산역 정차 횟수가 감소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익산역 정차 횟수 감축이나 KTX 혁신역 신설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 차관은 “김제역 4회 정차논리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타결”이라며 “코레일 등과 협의해 김제역 정차라는 지역 주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국토부장관과 코레일 사장 등을 잇따라 만나 김제역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JJC전북

YouTube | KakaoTV | NAVER TV

Daum | NAVER | jjctv전북

kt 올레TV ch.279 | Btv ch.285 | tv ch.253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